

과감한 대응, 지속적인 혁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주 형 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1. 들어가는 말 : 녹록치 않은 우리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던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내수 부진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경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회복국면에 진입하여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는 그간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며, 투자는 수익성 악화와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원화기준으로는 부진한 모습이며,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엔화 약세,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불안, 유럽발 위기 발생 가능성 등 대외 위협요인을 고려하면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간 개선되고 있으나, 추세적인 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미약한 원인에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취약요인 역시 자리 잡고 있다. 가계부문은 임금상승 둔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여력이 제한된 상태이며, 기업부문은 투자행태가 보수화되는 등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된 상태이다. 금융시장은 금융기관들의 보수주의가 팽배하면서 시중 자금흐름이 경색되고,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자금이 수혈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아직도 낮은 수준인 가운데 미래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낙후한 것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다.

이처럼 내수 부진, 구조적 문제, 대외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여건은 녹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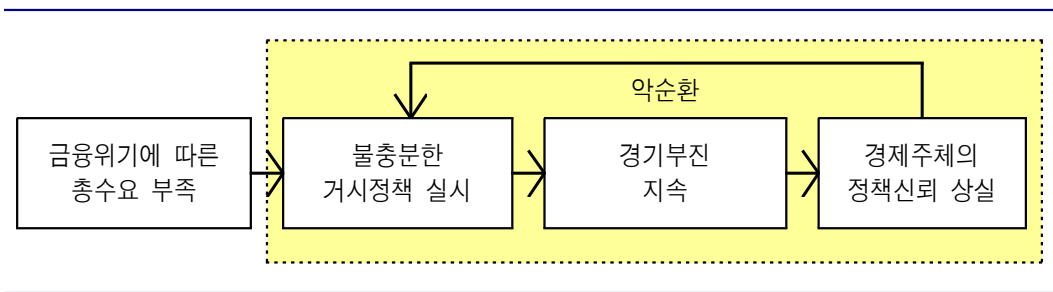
않은 상태이다.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친다면, 자칫 저성장·저물가·자산시장 부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경제주체들의 활력과 자신감을 회복시킬 정책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새 경제팀의 전략과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두 가지(two track) 전략

1) 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 극복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과감한 정책 대응”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 Krugman)이 언급한 “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2014.3.20)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저성장·고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소심성의 함정”을 지목하였다. 소심성의 함정이란, 경기침체 극복과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시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저항 등으로 인해 불충분한 정책(half-measures)을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경기부진의 지속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은 활력과 자신감을 상실하고,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일상화된다.

<그림 1> P. Krugman의 소심성의 함정



「소극적 정책대응 → 경기부진 지속 → 경제주체 신뢰 상실」의 소심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른 성장 무기력 현상(hysteresis effect)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경우에 있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협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역시 지난 10월 11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예상보다 미약한 세계경제 회복세를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고 야심찬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 9월 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2) 경제 체질 개선

어릴 적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자. 넘어질까 무서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된다. 이처럼 자전거는 오히려 멈춰있을 때보다도 속도가 붙었을 때가 더 안정적인데, 이를 자이로 효과(gyro effect)라고 한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제라는 자전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멈춰 서있는 자전거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먼저 주고, 그런 뒤에는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부지런히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 것, 즉 “지속적인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공공부문, 노동시장, 서비스, 금융 등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변화를 달성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는 병으로 쇠약해진 환자에게 먼저 증상을 완화하고 체력을 회복시키는 약을 처방한 뒤에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각국으로 하여금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부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스스로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공급측면의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노동, 서비스, 금융 등 경제구조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새 경제팀의 과감한 정책 대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 하에서 마련되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부문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적이

고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① 거시정책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②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③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큰 틀 하에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하에서는 새 경제팀의 과감한 정책대응 행보를 「41조원 + α 」 정책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41조원 + α 」 정책패키지를 통한 경기회복세 뒷받침

먼저 새 경제팀은 지난 7월 「41조원 + α 」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하고, 금융 부문에서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에 29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41조원 + α 」 정책 패키지 중 26조원은 금년 중에 공급하여 내수 활성화로 가시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표 1>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41조+ α 」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조원)
재정	■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11.7
	－ 기금운용계획 변경(주택, 신용보증 등)	8.6
	－ 재정집행률 제고('13년 대비 0.5%p)	2.8
	－ 민간 선투자 지원	0.3
	■ '15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 편성	－
금융	■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확대	29.0
	－ 산은·기은·수은 등 정책금융 확대	10.0
	－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50억불(약 5조원)
	－ 안전투자펀드 조성	5.0
	－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3.0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3.0
	－ 시장안정 P-CBO 추가발행	2.0
	－ 선박은행 조성	1.0
총계		40.7

우리 경제가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미약하고, 당초 예상된 경기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하방리스크 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새 경제팀은 지난 10월 성과위주로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41조원 + α 」 정책 패키지 중 2014년 집행목표를 기존의 26조원에서 「31조원 + α 」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일부 미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요건 완화,

기간 단축,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따른 추가 감축 재원을 서민생활 안정에 활용하는 등 “+ α”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등 아직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경제팀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과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규제를 금융업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단일화하는(LTV 70%, DTI 60%) 등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범위를 기존의 무주택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교체수요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청약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으로 공급 측면의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 LTV·DTI 규제 합리화

	지역	기존		변경
		은행, 보험	기타, 비은행	전 금융권
LTV	수도권	50~70%	60~85%	70%
	기타	60~70%	70~85%	
DTI	서울	50%	50~55%	60%
	경기/인천	60%	6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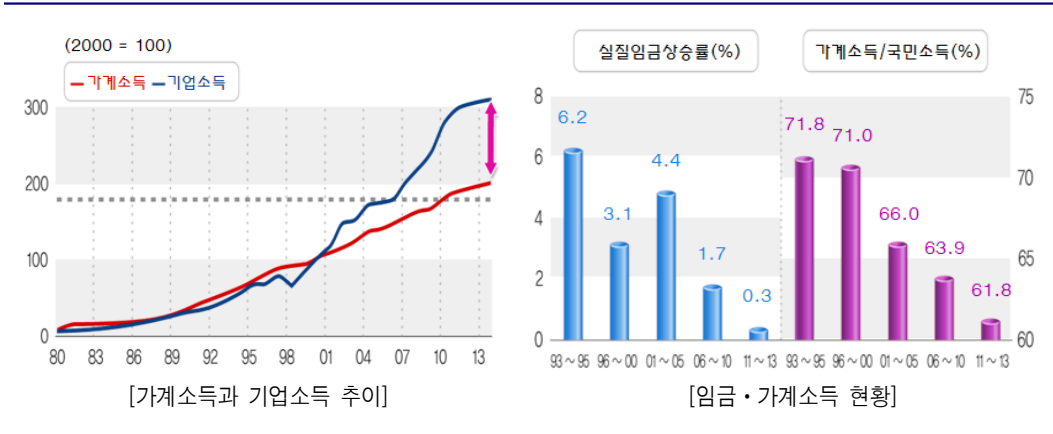
정부 발표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회복세로 전환되는 등 큰 틀에서 회복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1일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최장 30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등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또한, 청약제도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택사업시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요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선순환 구조 구축

전통적 경제정책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임금상승세의 둔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통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성장은 기업소득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계소득 부진은 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게 되

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원활히 환류되는 통로를 복원하여, 「가계소득 확충 ↔ 기업소득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괴리



이처럼 전통적 경제정책의 한계가 노정되자, 새 경제팀은 가계소득을 직접 타겟팅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가계소득의 직접적인 증대를 꾀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적정한 배당소득이 투자자와 가계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마련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안은 새 경제팀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을 구체화하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임금 증가분의 10%를(대기업 5%) 세액공제 하며,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율을 인하하는 동시에(14→9%),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하며, 기업의 소득이 투자·임금·배당 등에 활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임금·배당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10% 세율로 단일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우대하고(추가 공제율 1%p 인상),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30→40%) 등 투자·소비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도 포함하였다. 세계 일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

속 공제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고($\pm 25\% \rightarrow \pm 50\%$), 엔젤투자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50 \rightarrow 100%) 등의 세제지원도 강화하였다.

5)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내수부진 극복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 기조는 2015년 예산안에도 이어졌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 경기회복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5년 예산안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총지출을 전년대비 20.2조원 증액하여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

<표 3> 2015년 예산안 모습

(단위: 조원)

구 분	'14년(A)	'15년(B)
○ 총 수 입	369.3	382.7 (3.6% 증가)
○ 총 수 입	355.8	376.0 (5.7% 증가)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25.5$ ($\Delta 1.7$)	$\Delta 33.6$ ($\Delta 2.1$)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13.5 (0.9)	6.8 (0.4)
○ 국가채무 (GDP대비, %)	527.0 (35.1)	570.1 (35.7)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주안을 두었으며, 특히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SOC 투자 등을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편성된 2015년 예산안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확장적 정책대응 기조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예산안에 따르면 어려운 세입 여건,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다소간 상승하나,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시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표 4>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국제비교('14년)

(단위: %)

	한국	일본	영국	미국	OECD 평균
재정수지	$\Delta 1.7$	$\Delta 8.4$	$\Delta 5.3$	$\Delta 5.8$	$\Delta 3.9$
국가채무	35.1	229.6	101.7	106.2	111.1

IMF 등 국제기구도 우리의 양호한 재정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성장 친화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기존의 「소극적 정책대응 → 내수부진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에서 탈피하여 「지출확대 → 내수회복 → 세수증대」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4.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지난날 눈부신 성장을 일구었던 우리 경제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비정상적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시키고자 지난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3대 추진전략, 9대 과제와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목표	대한민국 대도약을 통한 “국민 행복 시대” 구현			
3대 추진 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 시대 준비
9+1 과제	① 공공부문 개혁 ②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③ 사회안전망 확충	① 창조경제 구현 ② 미래대비 투자 ③ 해외진출 촉진	① 투자여건 확충 ② 내수 기반 확대 ③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협업·구체적 성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창조경제 구현·미래대비 투자·해외진출 촉진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마지막으로 투자여건 확충·내수기반 확대·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경제혁신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혁신의 바람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59개 세부과제 중에서도 특히 우선

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혁신을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조경제 구현,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주요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새 경제팀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과도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1단계 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 개혁으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말 현재 중점관리기관 38개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 타결을 완료하였고, 부채중점관리기관(18개)은 24.4조원의 부채를 감축하여 2014년 1~8월 부채감축 목표 20.1조원을 초과달성하였다. 나아가 실효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사채 총량을 총부채의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매년 줄여나가는 공사채 총량제도를 도입('15년 본격 시행)하며 이러한 공사채 총량 목표를 '2014년~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향후에는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율 하락 등 부채감축 계획 수립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로 절감되는 재원 중 일부를 서민생활 안전에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한편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시범구축하고, 2015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에 대한 국고관리도 전면적으로 개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국유재산정보 통합포털을 구축하고, 국고금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국고관리 분야에서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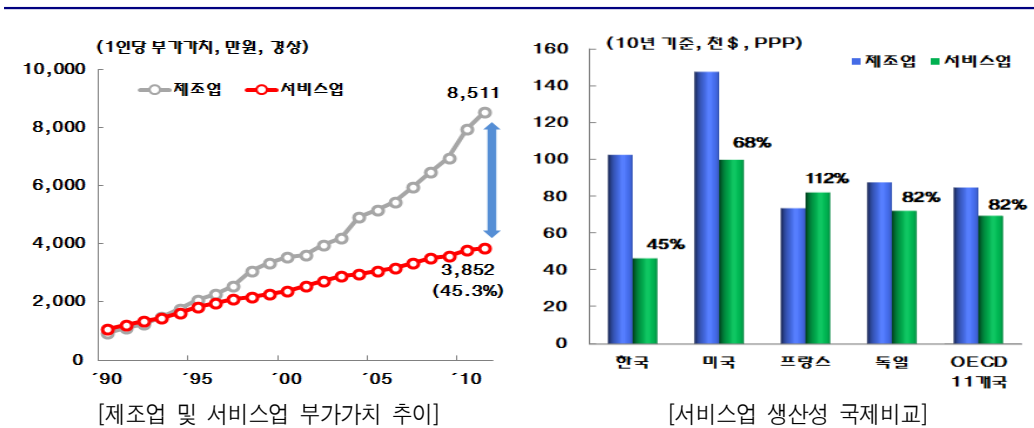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규제개혁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튜닝규제 완화, 푸드트럭 허용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52개의 현장건의 사항을 수렴하였다. 이후 후속조치 계획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52개의 현장건의 과제 중 대부분의 과제가 정부조치 완료되었다. 다만 지자체 인허가, 후속 마무리 절차 등으로 부분 완료된 과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연내에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작지만 실제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현장애로 사항을 ‘손톱 밑 가시’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1차 92건, 2차 100건, 3차 96건의 과제 중 다수가 정부조치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입지·환경·노동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개선하기 힘든 덩어리 규제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개선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규제개혁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신문고 운영, 미등록규제 정비 등 규제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공 사례 확산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법안심의를 위한 규제개선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새로운 성장 동력 - 유망 서비스업 육성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상황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격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동시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인 만큼 서비스업 육성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현주소



미래 성장 동력인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망 서비스산업 원스톱 TF를 가동해왔으며, 지난 8월 12일에는 「유망 서비스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로 가시적 성과사례를 창출하고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에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경쟁과 개방을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시장 창출·맞춤형 지원·성공사례 확산의 3대 전략도 수립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방문,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책의 체감도를 높여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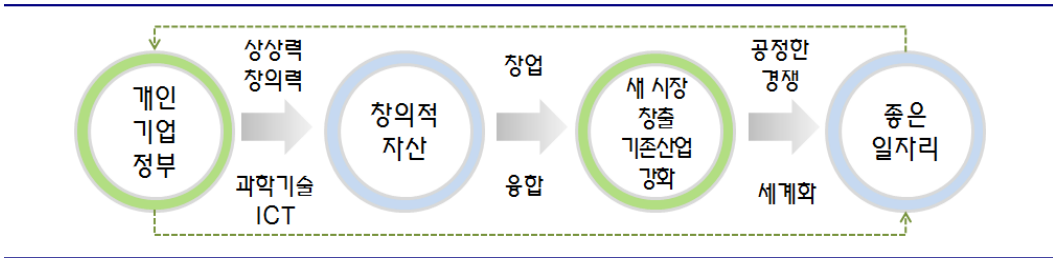
<그림 5> 유망 서비스업 육성 목표

분 야	대 상	'13년	'17년
보건·의료	해외환자 (연환자)	21만명 (65만명)	⇒ 50만명 (150만명)
관광·콘텐츠	해외관광객	1,218만명	⇒ 2,000만명
교 육	우수 외국대학 유치 (분야별 세계 20위권)	-	⇒ 3개 유치
금 융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6.7% ('12년)	⇒ 8.0%
물 류	물류산업 매출	92조원	⇒ 135조원
소프트웨어	SW 수출	40억불	⇒ 70억불

4)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 창조경제 구현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이 정신이 위축되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기술역량 또한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내는 창조경제의 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지난해 6월 ‘창조경제실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창조경제타운을 오픈하는 등 창조경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한편,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6> 창조경제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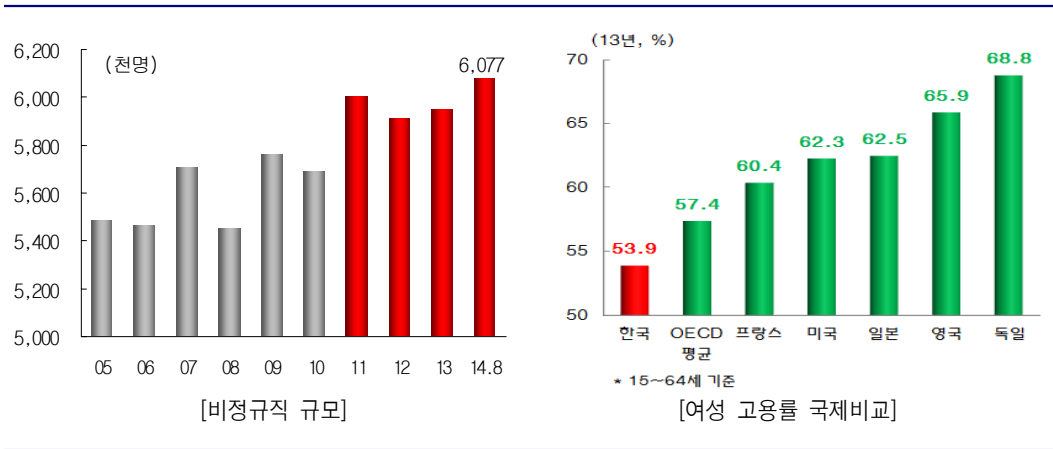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 R&D 투자, 창의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 내년도 창조경제 예산을 금년 7.1조원에서 8.3조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IT, BT, CT 등 업종이 다양하면서 유사 업종 간 밀집도가 높아 융·복합에 유리한 판교 테크노밸리에 벤처·창업 지원 기관과 ICT 신산업 인프라를 집적하여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5) 노동시장 활력 제고

우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증가와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동시에, 청년 취업난이 가중되고 여성 인적자원이 사장되는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림 7>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축소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의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 취업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

다음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6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이어, 금년 2월에는 시간제보육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간연장 및 급여인상 등의 대책을 포함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취업모 중심으로 보육지원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및 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문화가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하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통해 시간선택제 관련 제도와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년 10월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세부 보완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적 노력을 경주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5. 다시 도약하는 우리 경제

본고에서는 내수 부진, 구조적 문제, 대내외 리스크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two track)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전략은 기존의 임시방편적이고 소극적인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과감한 정책대응이었다. 이를 위해서 새 경제팀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 예산안 등을 통해 내수부진 극복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이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부문·노동시장·규제분야 등 사회 각 부문에 산적해 있는 우리 경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혁파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상의 두 가지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대인들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인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행동은 말보다 목소리가 더 크다.” 계획을 세우고 선언하는 것 못지않게 계획한 바대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경구는 정부의 정책대응과 구조개혁 노력에도 합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세부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녹록치 않은 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한 새 경제팀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경제주체들이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가지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 전문가, 언론, 정치권 등 사회 각 부문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 2014.2.25.
- _____, “고용률 70% 로드맵”, 2013.6.4.
- _____,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2013.12.11.
- _____, “「비정상상의 정상화」 추진과제”, 2013.12.10.
- _____,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7.24.
- _____,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방향”, 2014.7.31.
- _____,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보완대책”, 2014.10.15.
- _____,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 2013.11.13.
- _____,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 2014.10.15.
- _____, “유망 서비스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2014.8.12.
- _____,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2014.2.4.
- _____,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2014.9월.
- _____, “정상화대책 중점관리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안)”, 2014.2월.
- _____, “정상화대책 중점관리대상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2014.2월.
- _____,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2014.3.20.
- _____,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2013.6.10.
- _____, “창조경제 실현계획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2013.6.4.
- _____,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향”, 2014.10.8.
- _____, “2014년 경제정책방향”, 2013.12.27.
-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보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2014.3.20.
-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2014.8.6.
- _____,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9월.
- _____, “2015년 예산안”, 2014.9월.
- 자동차용어사전편찬회, “자이로 효과(gyro effect)”, 『자동차 용어사전』, 일진사, 2012.5.25.
- G20, “Communique,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2014.9.21.
- IMF, “Communique of the Thirtieth Meeting of the IMFC”, 2014.10.11.
- _____, “Fiscal Monitor - Back to Work : How Fiscal Policy Can Help”, 2014.10월.
- OECD, “Economic Outlook No. 95”, 2014.5.6.
- Paul R. Krugman, “The Timidity Trap”, The New York Times, 2014.3.20.